

친기업주의와 한국경제

I. 한국 민주화의 경제사적 고찰

1987년 6월항쟁 이후 20년이 지났다.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경제적으로 성장은 둔화되었고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사회적 분열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 그 사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곤해졌으며, 민주화로 얻어진 모든 혜택이 평가 절하될 정도로 민주화에 대한 서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대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기인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개방에 대처하면서 사회적 통합과 지속적 성장을 달성한 중소국가의 사례도 있다. 전략적으로 국제적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는 소규모 개방국가의 입장에서 세계화에 대처하는 정책의 모색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 비판은 세계화의 영향을 잘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과 인도 등의 고속 성장은 그 경쟁상대가 되는 한국경제에 과거와는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에 의해 육성된 대기업에게는 신흥 대규모 개발도상국은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이들 국가의 저비용 생산에 의해 중소기업 부문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 국가의 저임금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노동자들 역시 피해를 입는다.

세계화로 인해 새로운 갈등요소가 발생한 한국사회에서 민주화는 새로운 함의를 갖게 된다. 서구

의 민주화 과정도 경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과거 국왕이나 귀족들로 구성된 정치권력과는 별개의 산업화세력이 등장하면서, 절대 권력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산업화세력의 요구가 민주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이른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점차 확대되는 산업화세력의 실질적인 경제적 권익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혁명은 지속되었고, 혁명의 진행에 따라 산업화세력뿐 아니라 일반 시민권익도 함께 개선되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자본주의 경제사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시민권력 사이의 갈등과 조화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다. 서구에서 경제권력과 시민권력이 합세하여 정치권력을 제어하는 것이 시민혁명의 과정이었다면, 그 이후 급속히 성장한 경제권력과 시민권력 사이의 갈등과 대치, 조화가 반복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정치적 민주화는 자동적으로 경제적 민주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정치적 민주화에 의해 선출된 정부와 관료기구가 공정한 시장규칙의 제정과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경제성장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의 강력한 경제력을 통제하며 시장의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힘든 과제이다. 전반적으로 시민권력이 확장되면서 이러한 거대 기업집단으로 이루어진 경제권력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한편 경제성장의 과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갔는 과정이 서구의 경제발전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사적 관점에서 한국 민주화의 독특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산업화시기 압제적 정부에 의해 재벌이 육성되며 경제력 집중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시민세력에 의해 민주화가 추진되었다. 민주화의 기폭제가 된 1987년 6월항쟁 당시 한국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또한 경제성장과 동시 소득분배 상황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당시의 시민혁명은 경제적 필연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군사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에 대해 재벌조차도 반감을 갖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서민의 고통이 누적되어 촉발된 시민혁명으로 보기에 는 힘든 측면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87년 민주화이후 본격적으로 경제권력과 시민권력의 갈등과 대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 이전에 강력한 정치권력에 의해 경제권력을 제어하고 있었기에, 굳이 경제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견제장치를 갖출 필요가 없었다. 민주화는 곧 경제권력에 대한 제어 장치의 공백을 의미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경제권력과 시민권력 사이에서 조화로운 협조를 달성하기 위해 갈등과 대치국면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7년 대선에서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 그동안 보수진영은 분배와 균형성장을 강조하는 민주화세력에 의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었으며, 다시 과거 박정희시대와 같은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성장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기치로 내세우며 이를 위해 친기업주의를 최고의 정책수립이념으로 제시하

고 있다. 기업과 이해가 상충하는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유권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기업을 대외적으로 천명한다는 것은 민주화된 사회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앞서 밝힌 경제사적 시각에 의하면 경제권력과 시민권력 사이의 갈등 단계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추진의 선례를 역사적으로 찾아보고, 재벌위주의 불균형 성장을 추구해 온 한국경제에서 이러한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선험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II. 구미제국의 친기업주의와 파시즘

1. 미국의 진보시대

19세기 후반 미국은 신생 산업국가였다. 유럽과는 달리 왕정의 전통도 없고 설립 초기 느슨한 연방제를 선택한 미국은 경제권력과 시민권력이 직접적으로 갈등을 겪는 단계로 진행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유사하다.

미국에서 1890년에서 1920년까지의 기간을 진보시대(Progressive Era)라 부른다. 시민 권익의 증진을 위한 요구가 표면화되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거대 기업들의 경제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추진되었다. 이는 역으로 이 시기에 경제권력이 급속하게 성장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기업집단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 대규모 지주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당시 기업은 철저한 규제의 대상으로 주 정부의 설립인가를 비롯하여 각종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1888년 뉴저지 주에서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지주회사법을 제정한 것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지주회사가 출현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기업들의 연합체인 이른바 트러스트에 의한 독점의 폐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1890년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1911년 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을 33개의 법인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보수적인 대법원이 당시 미국 최대의 기업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반독점법 사상 가장 강력한 판례로 기록될 만큼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좋지 않은 일반 여론을 반영한 판결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1912년에는 기업집단 정책이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었다. 선거는 공화당의 현직 대통령 태프트(William Taft), 태프트에게 대통령을 물려주었다가 재도전하였지만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태프트에게 패하고 새롭게 진보당(Progressive Party)을 결성하여 출마한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¹⁾와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윌슨(Woodrow Wilson), 그리고 사회주의자당(Socialist Party)의 뎀스(Eugene V. Debs)를 포함하여 4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졌다.

진보시대를 대표하는 전현직과 새로 당선되는 세 명의 대통령이 모두 출마하였으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이 논란이 되었다는 선거라는 점에서 당시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여론을 반영하여 강력한 기업집단 규제를 내세웠지만 내용은 서로 달랐다. 태프트는 서면법에 의한 사법적 처리를 강조하였고, 루즈벨트는 사법적 해결보다는 행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주장했다.

윌슨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당시 문제가 심각했던 지주회사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반독점법인 클레이턴 법을 제정하였으나, 재계의 반대에 의해 입법과정에서 지주회사 조항이 전면 삭제되는 등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를 설립하여 감독을 강화했으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다.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러한 지주회사에 대한 견제노력은 중단되었다.

이렇게 볼 때 이른바 미국의 진보시대에서 경제권력에 대한 시민권력의 견제 시도는 실패하였다. 시기적으로 국민들도 기업의 효율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보수적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전환기를 맞게 된다.

2. 미국식 친기업주의 - 후버주의(Hooverism)

전쟁으로 인해 보수화된 미국은 친기업적인 사조가 만연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이 후버(Herbert Hoover)이다. 스탠포드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한 후 광산기술자로 시작하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광산 개발자로 활약하며 부를 축적했다. ‘위대한 기술자’ (The Great Engineer)로 칭송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1차 대전 중에는 해외 미국인에 대한 지원과 본국 송환과 관련한 업무를 통해 공직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전쟁 이후 후버는 1920년부터 1928년까지 미국의 상무부

1. 이 시기 미국에서도 경선에 불복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선례가 있었다.

장관(Secretary of Commerce)을 역임했다. ‘위대한 기술자’답게 그는 다시 최고의 능력을 갖춘 관료로 인정받는다. 1928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버는 58%의 득표율을 올리며, 48개 주중 40개 주에서 압승할 정도로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후버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미국식 친기업주의의 형태랄 수 있는 후버주의는 미국의 지배적 이념이었다. 후버는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기업의 효율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였다. 기업이 협조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기여한다는 조합국가(associative state)론을 통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 강국으로 거듭날 것을 주장하였다.²⁾ 기업이 생산비를 낮춰 제품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소비자도 혜택을 보게 되며, 기업이 성장하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 노동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목표로 제시했다. 각 산업마다 협회를 결성하여 제품을 표준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며, 공동의사결정을 통해 과당경쟁과 같은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기업들의 공동 의사결정체인 이러한 협회들에 의해 효율적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는 없었다. 심지어 기업의 효율성을 정부에도 적용하여 정부의 비대화를 제어하는 한편 이러한 효율성의 제고를 통해 계급적 갈등을 부추기는 좌파적 책동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상무부장관 시절이던 1922년 후버는 이미 기능이 약화된 노동부를 협조적인 위성부서로 전락시키고, 상무부를 정부 내에 가장 강력한 부서로 만들어 경제 정책을 주도했다. 정부의 반독점 부서는 그 이전까지 불법으로 간주되던 기업의 담합행위를 허가하는가 하면,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³⁾는 조사활동을 대폭 줄이고 대신 재계의 자율적 규율을 권장했다. 불법의 기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재계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방식을 따르기도 했다.

당시 친기업적인 시대사조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물은 재무부장관이었던 멜론(Andrew Mellon)이었다. 피츠버그의 은행가로 성공하여 석유를 비롯한 철도, 기관차, 건설, 보험회사 등 각종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거대 기업군의 지배주주였고 후에 반독점법의 중요한 사례로 등장하는 알루미늄 회사인 Alcoa를 창업하기도 했다. 당시 대표적인 기업인이었던 그가 1921년에서 1932년까지 무려 세 명의 대통령 밑에서 연속하여 재무부장관을 지낸 것 자체가 상징적이다.⁴⁾ 그는 기업인 출신답게 감세를 통해 대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소신 하에 강력한 감세정책을 추진한다. 그는 부자와 기업의 수입

2. 후버는 공직에서 받은 월급을 모두 기증할 정도로 스스로 도덕적 지도자임을 자임했다.

3.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는 기구임.

4. 그는 1913년 1천만 불을 기증하여, 현재의 카네기멜론대학의 전신이 되는 대학을 설립한다. 그가 대표적인 부호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대가 서민계층에 전이될 것이라는 하방침투(trickle-down)효과의 신봉자였다. 1924년 세법(Revenue Act)에 반영된 멜론 계획(Mellon Plan)에 의해 특히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했다. 반면 철저하게 작은 정부와 균형재정을 추구하여 재정건전화를 기하고 국가채무를 대폭 줄이는 정책을 취하였다.

기업 효율성의 확대를 통해 국가의 부흥을 꿈꾸는 후버대통령과 대기업가 출신 멜론 재무부장관을 주축으로 하는 1920년대 미국 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친기업적 정부일 것이다. 그러나 후버가 대통령이 된 후 1년이 채 안되어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후버는 금융기관과 모기지업체의 부실을 막기 위해 정부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반면 일반 서민들의 극심한 경제난에 대해서는 국가의 구호활동을 강화하기 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고통분담에 의해 불황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멜론은 사상 최악의 대공황 상황에서도 균형재정을 고집하였고, 후버가 기대하였던 월스트리트 은행가들과 기업가들의 자기희생적인 헌신은 발휘되지 않았다.

3. 미국의 시장개혁 - 루즈벨트의 뉴딜

친기업정책의 폐해는 컸다. 193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당선된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는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서 바로 친기업정책을 공격했다. 후버의 친기업정책으로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얻었지만, 이것이 일반 서민들에게 과실이 돌아오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1929년 이전에 이 나라는 건설과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사이클을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전쟁의 잔해 복구라는 명목으로 이 부문의 사업을 확장하였지만, 사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연스런 평소 성장을 벗어나는 수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생산비가 상당히 떨어졌는데도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에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윤은 가격 하락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는 망각되었습니다. 이윤의 아주 적은 부분만이 임금상승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로자는 망각되었습니다. 적절한 배당금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주는 망각되었습니다.(중략)

그 후에 경제 붕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 아십니다. 불필요한 공장에 들어간 잉여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구매력은 고갈되었습니다. 은행은 겁에 질려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가진 자들은 나누길 두려워했

습니다. 신용이 경색되었습니다. 산업이 멈췄습니다. 상업이 쇠퇴하고 실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1932년 7월 2일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경제력 집중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다룬다. 소수의 기업인에게 경제적 권력이 집중되어 온 과거의 경제운영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방식의 경제력 집중을 사적 사회주의(private socialism)로 명명하며 강력히 비판했다.⁵⁾

사적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기업의 운영이 명령경제체제(command and control system)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즉, 명령경제체제인 기업⁶⁾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면, 명령경제체제로 자원이 배분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며 이는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체제의 강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지주회사들이 일반 국민의 이해를 침해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기업가들에 대해 아무런 통제수단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 전제국가적 요소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시장에서 경제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성행하던 지주회사를 과감히 해체하고, 부자들에게 대한 조세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노동자, 중소기업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미국에서도 유럽처럼 국가가 직접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루즈벨트는 국가가 직접 시장에 간여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공정한 규칙이 준수되는 것을 감독하는 역할을 선택했다.

1933년 만들어지고 다음 해 개정된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을 통해 증권시장의 감독을 강화했다. 투자은행의 변칙적 운영을 금지하기 위해 1933년의 은행법(Banking Act)⁷⁾과

5. "It is time to make an effort to reverse that process of the concentration of power which has made most American citizens, once traditionally independent owners of their own businesses, helplessly dependent for their daily bread upon the favor of a very few, who, by devices such as holding companies, have taken for themselves unwarranted economic power. I am against private socialism of concentrated private power as thoroughly as I am against governmental socialism. The one is equally as dangerous as the other; and destruction of private socialism is utterly essential to avoid governmental socialism." (Roosevelt(1935)의 의회서한 중에서)

6. 이는 다시 기업의 지배구조가 매우 비민주적인 1920년대 미국이나 현재의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부작용이 더 커진다. 대기업가의 전제적 경영을 통제할 수 없다면 경제전체 뿐 아니라 기업 내에서의 불공정성은 심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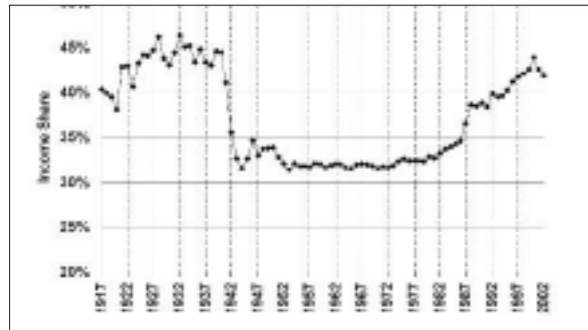
7. 일반적으로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 개정된 1935년의 은행법을 통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했다. 한편으로 조세개혁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넘어 경제권력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당시 대표적 개혁 이론가인 연방대법관 브랜데이스(Louis Brandeis)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력한 세제개혁도 추진했다.

당시 이러한 제도개혁은 매우 혁신적이었고 재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지만, 지금까지 유지되며 미국에서 시장의 규율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거시 변수들이 대공황 이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은 조세자료를 통해 최근 100년간 미국의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소득분배는 대공황 이전과 이후 급격히 변화한다. 대공황 이전에는 미국의 소득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의 45%에 달할 정도로 소득불균등이 심화되었다. 주목할 점은 대공황 이전 소득분배 추이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른바 친기업적 정책의 효과를 알 수 있다.

〈그림 1〉 미국의 상위 10% 소득비중 추이



출처 : Piketty와 Saez(2006)⁸⁾

뉴딜정책에 의해 제도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면서, 전후 미국의 고도 성장기에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지 않았음도 확인할 수 있다.

4. 레이건 정부의 친기업주의

위 그림의 또 하나의 특징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되는 추세이다. 미국 레이

8. Piketty, Thomas and Emmanuel Saez (2006),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A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NBER Working Paper 11955

건 정부나 영국의 대처수상 당시의 규제완화론은 시장에서 견제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완비한 후, 그동안 이중 규제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을 개혁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 그럼에도 과거 50년간 안정되게 유지되어 왔던 소득분배상황을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앞서 밝힌 대로 미국에서는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로 대규모 기업집단을 인위적으로 해체했고 대기업집단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시장 내에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시민권익의 증대와 복지지출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1980년에 들어서면 일부 정부부문의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이 제기되던 시기였다.

한편으로 국가의 역할 증대에 따른 부작용이 대처와 레이건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동기가 되었다면, 이 시기까지 이루어진 복지제도와 공정한 시장의 구축은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피해를 보는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크게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한 것이다.⁹⁾

합리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었던 레이건 당시의 감세나 규제완화에 의한 쌍둥이 적자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미국경제의 체질을 매우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주목해야 한다.

5. 나치즘의 친기업주의

패전과 대공황으로 피폐화된 독일에서 1932년 7월 총선거에서 37.3%를 득표한 나치당은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한 뒤 치른 1933년 3월 총선에서 43.9%의 득표율을 올린다. 히틀러는 대공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독일의 대기업집단을 살리면서, 한편으로 높은 실업률로 고통 받는 일반 대중의 요구에도 부응해야만 했다. 국가와 대기업집단이 결탁하면서 일반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제적 방법의 동원이 불가피했다. 일본의 경우도 재벌과의 결탁으로 인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과거 한국의 박정희 정부 역시 재벌과의 정경유착에 의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압제적 통치방식을 선택했는데, 상당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는 지식인과 언론의 주장에 대해 외부적 요인에 의

9. 이처럼 소비자나 노동자, 주주들의 권익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었기에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는 국가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의 대규모 부실인데, 이로 인해 막대한 예금보험기금이 소요되었다.

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충돌할 때, 압제적 방법을 동원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친기업정부의 정경유착 하에서 국민의 지지도가 하락할 때 압제적 방법을 주장하는 보수정치 세력의 준동을 막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국가사회주의적인 경로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정권 초기 대대적인 민심이반을 겪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특히 경계해야 하는 사항이다. 정경유착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할 때, 압제적 형태의 국가사회주의가 초래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III. 한국의 불균형 성장전략과 친기업주의

1. 불균형 성장전략과 재벌의 육성

87년 이전 한국은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와 같이 사유재산을 완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자원배분에 국가가 깊이 관여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독특한 형태의 성장 전략을 취했다. 군이 유사한 체제를 찾는다면 유럽에서의 나치즘이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와 같은 국가사회주의 체제와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사회주의에서는 시장 내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대형 경제주체가 요구되는데 바로 대기업집단이고 한국에서의 재벌이다.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재벌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완충장치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들 재벌들을 통한 불균형 성장으로 인해 한국의 산업구조는 독특한 형태로 발전한다. 특히 이렇게 성장한 재벌은 강력한 경제권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 - 은행 - 재벌이라는 연계 고리를 이용하여 정경유착과 관치를 통한 경제운영을 해 왔다. 국가가 주도하여 경제기획원에서 한국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국가 권력이 그 계획이 실현되도록 강제력을 발휘하였다. 때로는 공기업의 형태로 국가가 직접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여 대규모 재벌로 육성하는 정책을 취했다.

재벌과 국가권력은 공생관계를 유지하였다. 경제기획원이 수립한 계획에 의해 얻어지는 특혜가 이들 재벌에게 돌아가는 반면 이들 재벌은 관료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부실기업을 인수해 주는 등 정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이와 같은 공생관계는 일반인이 예상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였다. 구조적으로 정부는 은행을 통제하고 있었고, 자본이 부족하였던 재벌은 은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벌이 싼 은행의 자금을 갖다 쓰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대신 재벌은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부 주도의 국가운영방식을 의미하는 관치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주기적으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면서 대기업의 부도가 이어지고 금융시장이 부실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상위 재벌은 급속히 외형을 넓혀 한편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재벌의 입장에서 더 이상 정부의 간섭에 의한 비효율을 감내하기 힘들게 된다. 결국 이러한 모순적 상황이 정치적 민주화의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김영삼 정부의 친기업정책

민주화 이후 최초의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는 경제권력과 시민권력간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전제적 통치를 부정하는 민주정부라면 이제 시장의 자율을 보장해야 하는 반면 시장의 규칙을 정립하고 엄정히 집행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부정부패에 대한 사정을 강조하는 등 기본적 시장질서는 강조했지만, 재벌이라는 경제권력을 시민권력이 견제하고 조화를 달성하는 제도 마련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

실제로 경제정책은 10여 년 전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를 상당 부분 여과 없이 모방한 것이었다. 금융규제완화와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 등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관치를 청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관치라고 하는 매우 자의적인 정부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규율을 정립하는 과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금융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금융규제완화는 필연적으로 대규모의 금융부실을 초래했다. 종금사나 은행들은 규제완화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자 외형 불리기에만 급급했다. 대형화가 곧 경쟁력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위험관리는 경시했다. 경쟁적으로 재벌에게 대출해주었으며, 재벌들은 재벌대로 자율화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무시한 채 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 착수했으며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는 재벌의 투자를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재벌의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적신호가 계속되었지만 정부는 방치했다. 정부가 경제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벌이 원하는 규제완화만을 단행한 결과였다. 재벌의 대규모 부실이 현재화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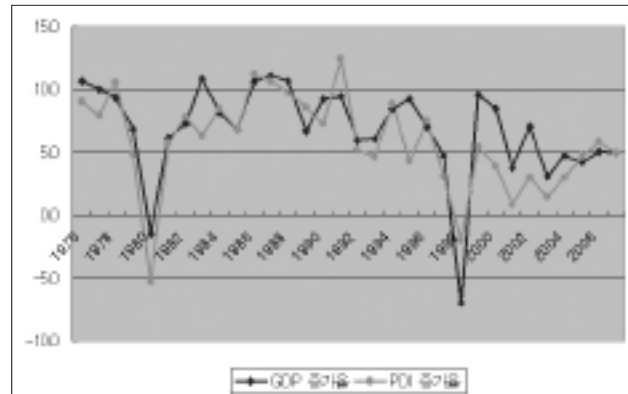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인해 외환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과거의 관치경제의 구습으로 인한 결과였다. 결국 외환위기는 경제권력을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첫 번째 위기였다.

3. 불균형 성장의 부작용

김영삼 정부시기까지 지속된 불균형 성장은 경제 전반에 걸친 왜곡현상으로 외형적 성장률과 국민들이 실감하는 소득간 괴리를 초래한다. 실제로 현재 경제성장의 척도로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많이 사용되지만,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국민의 후생수준을 나타내는 소득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과 실질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¹⁰⁾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0년대와는 달리 80년대에는 그런대로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90년대 들어 괴리율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과 실질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이러한 사실은 다시 〈그림 4〉에서 잘 나타난다. 〈그림 4〉는 국내총생산 대비 개인가처분소득과 법인가처분소득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개인가처분소득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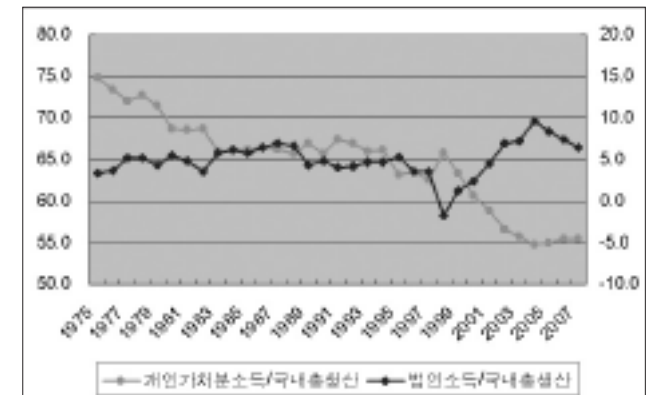
10. 한국은행이 발표한 명목 처분가능소득의 개인 부문 액수를 GDP디플레이터로 실질변수로 전환한 후 증가율을 산출하였다.

격히 하락하여 2004년 이후 55%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개인가처분소득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조세 부담률이 증가한 원인도 있을 것이다. 조세부담률¹¹⁾은 1980년대 16% 대에서 최근에는 20%를 다소 상회하는 정도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조세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부문의 서비스나 또는 복지지출을 통해 개인의 소득이 증가했다면 개인가처분소득의 비중이 크게 줄지 않았을 것이다.

〈그림 4〉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개인가처분소득 비율의 감소가 법인가처분소득 비율의 증가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국내총생산 대비 개인가처분소득과 법인가처분소득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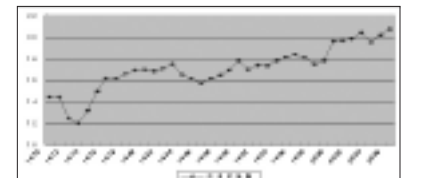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이러한 장기 시계열자료를 놓고 볼 때, 그동안 한국에서 외형적 성장이 개인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림 5〉는 소득 5분위 배율¹²⁾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장기 추이를 보기 위해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에 대한 조사 자료를 사용했는데, 최근 자료가 발표되고 있는 1인 가구와 농가가구를 포함한 전국 가구 자료에 의한 5분위 배율자료는 더

11.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12. 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OECD자료와 맞추기 위해 개선된 소득분배지표를 발표했는데 작년까지 발표하던 자료와 추세 자체가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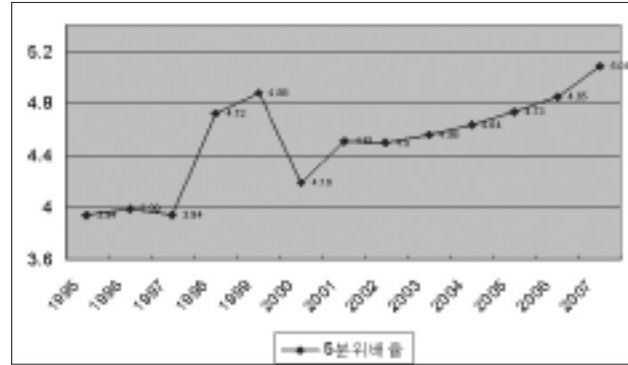
〈그림 3〉 조세부담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욱 나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소득분배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림 5〉 도시 2인 이상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배율



* 자료 : 통계청

〈그림 4〉와 〈그림 5〉를 종합해서 본다면, 국내총생산 중에서 개인가처분소득의 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소득분배상황도 동시에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상위 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의 경우에는 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실감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4. 계속된 친기업정책과 양극화

개인의 소득 비중은 줄어들고 소득분배 상황은 악화되는 상황이 외환위기 이후 분배를 강조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하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그림 4〉에서 외환위기 이후 법인의 가처분소득 비율이 급격히 늘면서 개인가처분소득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부문의 회생과 건설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한 결과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가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다. 주식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품 방치, 신용카드시장의 규제완화로 인한 대규모 부실,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한 자산거품 등의 정책은 개인부문에서 법인부문으로 소득의 이전효과를 가져왔다. 바이코리아 열풍을 타고 상장기업들은 자본을 건설화했지만 결국 주가가 폭락하면서 개인부문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었고, 그 결과 소득은 부진하게 되었다. 코스닥 거품도 신용카드 거품도 모두 같은 효과를 초래했다.

다른 한편에서 경제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영미의 사후적 규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

는 수준이었다.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일시 해제된 틈을 타서 재벌들은 계열사 출자를 크게 늘려, 총수의 지배권을 강화했다. 이른바 99년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한다고 선언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했지만, 그 이후 정권 말기에 들어 다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는 등 강력한 재벌의 경제권력을 통제하는 수준은 되지 못했다. 이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을 감안하여 사후적으로 조망할 때 결국 김대중 정부에서도 기업의 이익창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지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시장규칙의 정립에 노력하기 보다는 기업의 투자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하는 정책을 폈다. 마찬가지로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보다는 손쉽게 기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계속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지 못하여,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반영하고 있는 〈그림 5〉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노무현 정부 들어서 소득분배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보이고 있는 소득계층별 소비 행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6〉에서 상위 30%의 소득계층은 외환위기 이전의 평균소비성향을 회복하고 있다. 중위 40%의 소득계층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위 30%의 소득계층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소비성향이 100%가 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하위 소득계층에서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 지속적으로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소득계층별 가계 평균소비성향 추이



*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하위 30%의 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이들 계층이 최대한 소비를 절약하더라도 소득을 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곧 대

부분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한다. 반면 상위 소득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의 증가폭은 크지 않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양극화로 인해 정책의 효과도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상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부양효과가 낮지만,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은 경기부양효과를 크게 한다는 것이다.

IV. 이명박 정부 친기업정책의 위험성

현재 한국은 시민권력이 비대한 경제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적 민주화가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은 경제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규제완화와 감세를 정책수단으로 채택했다. 피상적으로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을 모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세와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정책기조가 특히 그렇다.

경제력 집중에 의한 부작용을 시정하는 사후적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영미의 상황에서 설득력을 얻은 작은 정부론이나 규제완화론을 현재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 부정한 기업인에 대한 수십 년의 실행을 연도하는 국가의 규제완화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벌총수를 처벌하지 못하는 국가에서의 규제완화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장의 규율이 정립된 국가에서의 규제완화론과 고도 성장기의 일방적인 친기업적 관행이 지속되는 한국에서의 규제완화론은 그 효과가 크게 다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보다는 1920년대 후버리즘과 더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한 상황에서의 친기업정책은 사실상 친재벌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친기업정책을 주장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책보다는, 재벌에게 유리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출범하자마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철폐와 지주회사 제도의 완화 추진방향을 밝힌 바 있다.

1930년 이후 미국에서 한국과 같은 순환출자를 포함한 복잡한 소유구조의 기업집단은 찾기 힘들다. 다층적 지주회사 역시 뉴딜 정책을 통해 해체한 바 있다. 1920년대 미국에서 다층적 지주회사가

성행했고, 이러한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된 결과 대공황이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이미 경제력 집중이 심한 한국에서 다시 규제완화를 한다면 바로 1920년대 미국적 상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1980년대 미국의 모습과는 유사점을 찾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친재벌정책의 이론적 배경은 이른바 후방침투효과(trickle down effect)이다. 재벌과 부자들의 수입이 증가하면, 그것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후방침투효과 효과의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많은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한국경제의 후방침투효과는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반면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재벌기업들의 수입은 증가하지만, 거대한 저비용 생산기지인 중국이나 동남아의 기업들과 무한경쟁에 몰린 중소기업이 쇠락하게 하는 국제적 상황에 기인한다. 재벌의 수익증대가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하도급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한 빨대효과에 의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과거와 전혀 다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한국경제의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의 친재벌정책인 친기업정책을 추진하고,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한다면 양극화는 훨씬 심화될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서 친부자, 친재벌 정책이 국민경제 전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후방침투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V. 결론

경제사적 고찰에 의하면 경제성장을 촉진한 것은 친기업주의가 아니라 친시장주의였다. 친기업주의는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의 당사자인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를 저해한다.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친기업주의에 따른 규제완화가 중요하지만 시장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불공정 행위의 당사자인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시장경제 국가에서 기업에 대한 경제규제는 강화되고 완화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친기업주의에 따른 감세론과 복지 증대를 위한 증세론을 통한 정부의 규모 논쟁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친기업주의에 따른 규제완화론이나 감세론을 주장하기 이전에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장경제 국가에서 규제완화론의 본질은 시장에서 견제와 균형이 적절히 작동하기 위한 시장규율의 확립과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시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정도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할 때 규제를 완화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장하는 친기업주의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의 시장에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규제완화는 재벌에 의한 시장 왜곡 현상을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할 때 현실화되어야 한다.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부가 큰 정부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감세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감세를 통한 효과가 국민경제 전반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이 발표문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재 한국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증거를 제시했다. 반면 한국적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대공황과 같은 위기가 발생할 위험을 지적했다. 재벌의 경제력이 강력한 시장에서 재벌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붕괴한다. 설사 재벌이 효율성을 발휘하여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전반적인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수요기반을 위축시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초래한다.

이미 이러한 실책은 과거 정부에서 반복되었다. 한국에서 시장의 규율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 외환위기가 초래되었으며, 그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신용카드, 재벌, 부동산 문제 등에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잘못된 정책에 의한 모든 부담은 일반 국민과 노동자가 지고 재벌들은 안전하게 위기에서 빠져나왔다. 경기를 살린다고 주식거품을 일으켜 재벌들은 자본을 축적하였고, 반면 벤처거품으로 많은 중소기업은 몰락하였고, 가계의 부실은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 규제완화가 지속되었고, 신용카드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에서는 시장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노동제도는 가장 규율이 약한 영미식을 도입하고서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항할 수 있는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유럽식의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고서 기업에 대해서는 영미식의 완화된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 필요한 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부문의 개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에서 공정한 규율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민주적 대의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노동자, 소비자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를 도입하는 동시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영미식의 사후적 규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공공성을 발휘하는 정부로 기능해야 한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원리는 같다. '견제와 균형'이다. 유럽에서 정부가 국민을 대변하는 사전적 규제를 위주로 하거나 영미에서 시장에서 경제적 약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 규제를 위주로 하거나, 그 근본원리는 시장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여 공정한 거래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있다.

경제권력의 강력한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장치는 정치적 민주화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한국에서 경제적 민주화를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친기업정책을 취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의해 시장경제에서 세력 균형은 급속히 와해되고, 시장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는 가중될 것이다.

지금처럼 경제력이 소수 재벌에 집중된 상황에서 시장을 강화한다면 결국은 경제권력을 가진 재벌의 독점적 의사결정권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가의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통제를 강조하다 보면 이 역시 일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제 성장의 문제이든,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문제이든, 결국은 거대기업과 국가가 가지는 의사결정권의 독점화 현상을 막아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적,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법적, 계약적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이 그 권리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계속 만들어 주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장도 합리화되고 국가도 민주화되는 것이지요. 불법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호소하고 손해를 보상받는 길을 만들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나 국가가 스스로 진화하는 걸 기다릴 수는 없지요.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결국, 시장과 국가를 통제하는 것 자체가 바로 개혁과 진보의 과제라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맡겨서 시혜적으로 주어지기를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 김상조 『한국경제 새판짜기』¹³⁾ 중에서

이제 경제적 민주화운동을 위해 새롭게 시작할 때다. 정치가 경제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찾아 나설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13. 김상조, 유종일, 홍중학, 광정수, 『한국경제 새판짜기』, 2007, 미들하우스